

##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A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s of newsmen's privilege and obligation to truthfulness of press

조 재 현(Cho, Jae Hyun)\*

### ABSTRACT

Newsmen's privilege is that of journalist, reporters and other news gatherers to claim a qualified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when faced with a court order to produce material and/or the names of sources during a judicial or investigatory proceeding. This privilege is a necessary precondition to achieve true and fair reporting of press. In America, the protection of the newsmen has been iss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In *Branzburg v. Hayes*, the Supreme Court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whether the First Amendment provided newsmen with a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of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courts may not provide news gatherers with a privilege to withhold their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conducted in good faith and the court declined to interpret the First Amendment to grant newsmen a testimonial privilege that other citizens do not enjoy. And in *Zurcher v. Stanford Daily*,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search warrants as well as subpoenas, are permissible in proper circumstance and it does not make a constitutional difference in our judgement. In Germany, Federal Criminal Procedure Code(StPO) Article 53, Section 1, Clause 5 and Federal Civil Procedure Code(ZPO) Article 383, Section 1, Clause 5 prescribes the right not to testify(Zeugnisverweigerungsrecht). In Korea, there is no clear Article which protects the newsmen's privilege. The prevailing opinions in Korea have to recognize the right for newsmen not to testify, because newsmen's privilege is the essential part of free speech. Therefore by protecting newsmen's privilege, we can enhance the free press. If we accept that free press is indispensable to a free society, we need to discuss the issues to exp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of news. If so, for example, newsmen's privilege could be qualified for the professional journalist as well as none professional journalist. However the expansion of newsmen's privilege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The best way of expansion of that is legislative solutions. If not, it is necessary to take a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such a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United States or judicial guideline.

Key words: press, truthfulness of press, sources of news, newsmen's privilege, none professional journalist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박사

## I. 들어가며

취재원의 보호에 관한 논쟁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방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가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적이 있다. 2015. 4. 17.에는 취재원 보호 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취재원 보호의 공적 담론은 정보의 유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린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을 증가시키는 것<sup>1)</sup>이 취재원 보호의 목표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다양한 정보제공자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언론인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묵비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과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보장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취재원 묵비권, 취재원 비닉권, 언론인 또는 기자의 특권으로서 논의된다(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의 특권’으로 통칭한다). 언론인은 스스로 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자신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뉴스를 제공한다. 뉴스의 소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비밀스러운 정보제공자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 소재로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와 정보원은 그 자체로서 언론의 공적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밀스러운 정보의 근원(confidential source)이나 그것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인의 특권 논쟁에서 중심적 이슈가 된다. 정보의 근원이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에 대한 정보의 파급효과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법적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제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들의 신원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의 유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sup>2)</sup>

종래에는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사법정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한 정보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신원공개를 밝히기 위하여 편집 공간을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가에 관한 문제 등이다. 지금도 그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취재원 보호에 관한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취재원이 보호되어

1) Mary-Rose Papandrea, Citizen journalism and the reporter's privilege, 91 Minn. L. Rev. 515, 2007, p. 535.

2) Mary-Rose Papandrea(fn 1), p. 536.

야 한다는 전제에서 어느 범위까지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방법이 변하고 있다.

언론인의 특권 인정여부는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헌법이론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오늘날 언론의 기능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언론매체는 잠재된 부패를 드러내고, 변화를 주도한다.<sup>3)</sup> 언론은 정보의 유통 기능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제4의 특수한 조직으로 설계되었다.<sup>4)</sup>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sup>5)</sup>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언론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언론의 확대된 기능 속에서 취재원 보호의 논제는 이제 그것의 인정여부에서 더 나아가 그것의 확대를 위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II. 취재원 보호의 역사

취재원의 보호의 오랜 역사는 미국의 헌정사에서 발견된다. 미국에서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 주헌법과 법률 등에 의해 발전해오고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그들의 정보원에 대하여 밝히거나 증언을 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언론인의 특권으로 해석된다.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하에서 미국 정부가 잘못하거나 행정의 부적절·비효율적이고 은밀한 작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6)</sup> 대다수의 주는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연방차원의 입법적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경우 증언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는 약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다. 취재원에 관한 증언거부권은 처음에는 신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4년의 독일제국신문법(Reichspressgesetz)이나 1877년의 독일제국형사소송법(Reichsstrafprozeßordnung)에서 증언거부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1926년의 바이마르공화국의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증언거부권이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증언거부권은 그 주체가 신문의 종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증언거부권의 내용에 있어서도 편집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3) Jane Kirtley, The Future of privilege for the press, 19 Comm. L. & Pol'y 109, 2014, p. 110.

4) Lauren J. Russell, Shielding the media: In an age of bloggers, tweeters, and leakers, will congress succeed in defining the term "Journalist" and in passing a long-sought Federal Shield Act?, 93 Or. L. Rev. 193, 2014, p. 200.

5) Lauren J. Russell(fn 4), p. 196.

6)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p. 275.

인정되었다. 1945년 이후부터는 바이에른 주나 헤센 주 등이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공포하였고, 연방차원에서의 증언거부권은 1950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1953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통하여 인정되기 시작하였다.<sup>7)</sup>

과거 우리나라에도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015. 4. 17.에는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신원파악으로부터 취재원을 보호하고, 그것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검찰은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수단을 통원하여 취재원의 신원파악과 문건유출의 문제에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취재원보호 법안에서는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 보도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를 누리는 언론인은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면서도 형사사법 정의를 위하여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 Ⅲ.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

취재원의 보호는 주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 1. 범죄정보와 관련한 취재원은 공개되어야 하는가?

##### 1) Branzburg사건

사회감시자로서 언론의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언론은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확산을 방지한다. 사회적 비리나 부패현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때로는 제3자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로 발전한다. 언론인이나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증인 등이 되기도 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7)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S. 200-202.

민사사건(Civil case)에서는 취재원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sup> 민사사건에서 언론인이 정보와 정보원을 누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언론인의 특권보다 중시되지 않는다.<sup>9)</sup>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 간에 비밀유지약속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러한 비밀유지 약속이 없는 경우에도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한다.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언론인의 특권 인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비밀유지 약속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원에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언론인의 독립적 지위 때문에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sup>10)</sup> Branzburg 사건 이후 민사적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인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의 법원의 태도이다. 연방 하급법원은 Branzburg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왔다.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정보가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정보가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압도적 이익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sup>11)</sup> 연방 대법원은 형사사건인 Branzburg 사건에서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Branzburg 사건이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형사사건에서 취재원 보호의 인정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 범죄정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체적 정의를 밝히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하다. 범죄정보 제공자의 신원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취재원의 보호와 갈등·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취재원 보호는 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의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미국에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보호되는가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서 최초의 판단을 받은 것은 Branzburg v. Hayes 사건<sup>13)</sup>이다. Branzbur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8) Ronald D. Rotunda/John E. Nowak,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West Publishing Co.), 5th ed., vol. 4, 1992, p. 130.

9) Katyrn A. Rosenbaum, Protecting more than the front page: Codifying a reporter's privilege for digital and citizen Journalists, 89 Notre Dame L. Rev. 1427, 2014, p. 1441.

10) Katyrn A. Rosenbaum(fn 9), p. 1442.

11) Amanda A. Konarski(fn 6), p. 265.

12) Amanda A. Konarski(fn 6), p. 266.

13) Branzburg v. Hayes, 408 U.S. 665(1972). 1969년 11월 15일 Louisville Courier-Journal의 기자인 Paul Branzburg는 Kentucky 주의 Jefferson County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는 두 청년에 대한 관찰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기사는 작업대 위에서 마약을 제조 중인 양 손의 사진도 함께 실었으며, 기자가 그들의 신원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Kentucky 주에서는 허가 없이 마약을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벌금 및 구류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Jefferson County의 대배심은 Branzburg를 소환하여 그 두 청년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ranzburg는 기자의 증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Kentucky 주의 보호법규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Kentucky 주 항소법원은 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주 법규가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기자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신원이나 개인적으로 관찰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그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은 5 : 4의 다수결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헌법상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배심 앞에서 기자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sup>14)</sup> 기자들도 대배심의 증언요구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15)</sup>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기자가 갖는 조건부 특권을 주장하였다. 기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범죄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압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밝히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으로 증언을 위해 출두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는 어떠한 경우에 증언을 위해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sup>16)</sup> 증언거부권이라는 특권을 인정하여 그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시하였다.<sup>17)</sup>

Branzburg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초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청구인들은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할 기자의 특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기자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스튜어트(Stewart)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제한적인 기자의 특권을, 더글라스(Douglas) 판사는 절대적인 특권을 인정하였고, 파웰(Powell) 판사는 법정의견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자의 특권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반대의견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8)</sup> 스튜어트 판사는 다수의견이 대배심에 소환된 기자에게 취재원을 보호할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파웰 판사는 대배심에 증언을 위하여 소환된 기자라고 할지라도 뉴스를 수집하거나 그들의 정보원의 보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0)</sup>

Branzburg사건은 언론인의 특권을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Farber사건<sup>21)</sup>은 주 보호법과 헌법규정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Farber사건에서 뉴

14) 408 U.S. 665, 667.

15) 408 U.S. 665, 668, 682-683.

16) 408 U.S. 665, 702.

17) 408 U.S. 665, 704.

18) Jeffrey S. Nestler, The underprivileged profession: The case for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the journalists privilege, 154 U. Pa. L. Rev. 201, 222(2005), 최희경, “미국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2008, 418-419면에서 재인용.

19) 408 U.S. 665, 725.

20) 408 U.S. 665, 709.

21) In re Farber, 78 N.J. 259, 394 A. 2d 330(1978). New Jersey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들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New York Times의 Myron Farber기자와 신문사는 대배심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정헌법 제1조와 New Jersey 주 보호법을 인용하여 자

저지(New Jersey) 주 대법원은 주 보호법도 수정헌법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과 관련된 주의 헌법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취재원의 보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2)</sup>

Branzburg사건에 기초해서 취재원 보호문제를 다시 촉발시킨 것이 리크게이트(Leak Gate)사건이다. 리크게이트 사건<sup>23)</sup>은 Matthew Copper기자와 Judith Miller기자가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한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한 특별검사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범정부 독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범정부독죄로 기소된 Copper기자와 Miller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의 연방대법원이 내린 Branzburg사건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다.<sup>24)</sup> 2005년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대배심의 소환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기자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25)</sup>

## 2) Branzburg사건 이후 판례의 경향

Branzburg사건은 과거의 많은 선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다. 하급법원들은 Branzburg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선례를 적용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Branzburg사건에서 적용에 있어서 연방순회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s of Appeal)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제1, 제2, 제3, 제4, 제5, 제10, 제11 순회항소법원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모두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한다. 특권의 인정범위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LaRouche test<sup>26)</sup>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할 언론인의 특권은 정보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압도할 수 없다면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원을 공개할 압도적 이익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7)28)</sup>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은 민사사

료 제출을 거부한 Farber기자는 범정부독죄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다.

22) Ronald D. Rotunda/John E. Nowak(fn 8), p. 129.

23) Miller v. U.S. 545 U.S.1150; Copper v. U.S. 545 U.S.1150(2005).

24) 리크게이트 사건의 소송진행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성/한상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취재원보호-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2005. 12, 53면 이하 참조.

25) Joseph W. Trusi, The reporter's privilege in the 21<sup>st</sup> Century: The need for a qualified Federal Media Shield Law that balances freedom of speech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54 Santa Clara L. Rev. 201, 2014, p. 214.

26) La Rouche v. National Broadcasting Co., 780 F.2d. 1134, 1139(4th Cir. 1986).

건과 형사사건을 차별하지 않는다. 비밀정보에 관하여 증언을 해야 하는 기자의 이익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차이를 이끌어낼 만한 법적 원칙으로서의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 언론인의 특권은 민사사건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보다 형사사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sup>29)</sup>

Branzburg사건 이후 취재원의 보호를 인정한 법원의 특징은 LaRouche test<sup>30)</sup>를 적용했다는 점이고, 대표적 사건이 Branzburg사건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는 United States v. Sterling<sup>31)</sup>이다. 스티어링(Sterling)사건에서 법원은 LaRouche test를 적용하여,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입증책임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 둘째, 범죄정보가 다른 대안적 수단 즉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덜 제약하는 방법에 의해 획득될 수 없다는 것, 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압도할만한 긴절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6 순회법원(Sixth Circuit)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7 순회법원도 언론인의 특권이 헌법과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제8 순회법원도 언론인의 특권 인정을 위한 정확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sup>32)</sup> 제9 순회법원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대배심절차에서는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 하급법원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언론인의 특권의 존재와 부존재로 하급법원의 분열이 나타난 것은 Branzburg판결이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취재원 보호에 대한 답을 주었다기보다는 보다 오히려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법원의 분열을 가중시켰다고 평가된다.<sup>33)</sup> 하급법원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분열과 부조화경향은 Branzburg판결을 잘못 해석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연방대법원이 다시 Branzburg판결을 재검토하고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sup>34)</sup>

Branzburg사건 이후 법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취재원의 보호문제를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대다수의 법원은 언론인의 특권은 적어도 수정헌법 제1조의 어떠한 형태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 수정헌법 제1조가 기

27) Amanda A. Konarski, (fn 6) p. 266.

28) United States v. Sterling, 724 F. 3d 482, 488(4th Cir. 2013).

29) Amanda A. Konarski (fn 6), p. 267.

30) La Rouche v. National Broadcasting Co., 780 F.2d. 1134, 1139(4th Cir. 1986).

31) United States v. Sterling, 724 F. 3d 482, 488(4th Cir. 2013).

32) Joseph W. Trusi (fn 25), p. 213.

33) Amanda A. Konarski (fn 6), p. 264-265.

34) Amanda A. Konarski (fn 6), p. 267.



자의 취재원보호를 위한 특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경쟁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최대한 유통되어야 하며, 진실이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하급법원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언론인의 특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어느 범위까지 언론인의 특권이 적용되는지, 어떠한 보도에 대하여 특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보도가 있는지에 관하여 나타난다.

## 2.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한가?

범죄와 관련한 정보는 직접적인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에 의하기도 한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접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분견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취재원의 신원파악을 시도하였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범죄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과 언론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편집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미국에서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문제된 사건은 *Zurcher v. Stanford Daily* 사건<sup>36)</sup>이다. 1971년 4월 9일 스탠포드대학에서 일어난 폭력적 시위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력적 시위에 가담한 두 명의 학생은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학교신문인 ‘스탠포드 데일리지(the Stanford Daily)’는 시위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그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방검사는 그 사건의 필름 때문에 데일리지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위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 영장은 범인의 신원과 필름 등의 증거물이 데일리지의 건물구내에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신문사의 사무실은 몇몇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되었으며 이미 보도된 사진들에 한해서만 조사되었는데 어떤 증거물도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71년 5월에 데일리지와 몇몇 직원들은 팔로알토경찰서(Palo Alto Police Department)의 서장, 담당 경찰, 지방검사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과 항소심에서는 신문사 내에서의 수색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5 : 3의 다수결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5조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취재원이나 편집상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도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 하에서 수색영장

35) Amanda A. Konarski(fn 6), p. 277.

36) *Zurcher v. Stanford Daily*, 436 U.S. 547(1978).

의 합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며, 소유자가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주 정부로 하여금 압수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대의견은 신문사 편집실에서 경찰이 수색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신문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여 뉴스보도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편집, 발행 등의 활동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다만, 신문사 수색의 경우와는 달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신문사가 보도를 위한 기사와 자료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도된 자료에 관하여 청문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소환장의 발부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언론사의 압수·수색 허용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것에 대한 일반법률에 의한 제한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독일 헌법은 제5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일반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 공영방송국이 촬영한 폭력적 시위장면을 담은 필름의 압수·수색을 명한 법원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정보의 습득, 정보제공자와 방송의 신뢰관계, 편집활동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도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일반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독일 연방형사소송법(StPO) 제53조 제1항 제5호<sup>37)</sup>와 연방민사소송법(ZPO) 제383조 제1항 제5호<sup>38)</sup>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7조 제5항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sup>39)</sup>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증언거부권의 주체나 대상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sup>40)</sup> 형사소송법에는 제94조 제1항<sup>41)</sup>은 범죄수사 증거자료에 대하여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범죄관련 증거자료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37) 연방형사소송법(StPO) 제53조 제1항 제5호. 정기간행물 기타 방송의 준비, 제작, 배포 또는 배포에 직업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논문 기타 기록의 저작자·전달자·보관자 및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전달에 관하여 그 논문 기타 기록 및 전달이 편집활동을 위하여 문제되었던 범위 내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화된다.

38) 연방민사소송법(ZPO) 제383조 제1항 제5호에서 언론관련 종사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하여는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9) 연방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나 편집인,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음향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자기테이프, 그 복사물 기타 표현물에 대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40)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3문. 증언거부권자가 공범, 범죄비호, 은닉 또는 장물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행위를 통해 제작된 물건, 범죄행위를 행하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특정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물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압류제한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1) 연방형사소송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범죄수사에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보관(Verwahrung)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거나 임의로 인도되지 않는 경우에 압수가 필요하게 된다.”고 규정한다.

제한사유로서 일반법률에 해당한다.<sup>42)</sup>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일반법률의 제한에 의하여 보호법익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범죄와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이나 압수·수색 금지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치국가적 과제에 배치될 수 있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sup>43)</sup>

이 사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해 편집상의 비밀보장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증언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언론인에 대하여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직접 강요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언론사의 편집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상의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중한 사법적인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생각건대, 취재원을 밝힐 목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는 어렵다. 반면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 정의를 이유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증언거부권의 주체나 대상이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당 영장이 절차상 명백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영장의 내용에 대해 그 당부를 가려가며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5)</sup>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형량과 비례성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현행 법상으로는 취재원보호는 어렵다. 그 때문에 영장의 청구나 발부에 있어서 취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집행이 요청된다. 취재원에 대한 제한적인 법집행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집행당국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덜 침해적인 법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취재원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42) BVerfGE 77, 65, 75.

43) BVerfGE 77, 65, 76.

44)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fn 8), S. 211; BVerfGE 20, 162, 186ff.

45) 오양호, “취재원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이어야”, 신문과 방송, 2003. 9, 69면.

## IV. 취재원 보호의 목적과 범위

미국에서는 Branzburg 사건 이후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나 목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취재원 보호의 관점을 정보제공의 대상, 목적에 두는가 아니면, 정보의 유통 과정에 두는가에 따라 취재원 보호의 범위도 달라진다.

### 1. 정보의 대상 또는 목적의 보호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특권의 인정여부는 달리 이해된다. 언론인의 특권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정부와 관련되거나 정치적 특성을 지닌 전형적인 공공의 관심사를 포함하는 공적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인에게만 특권이 적용된다고 한다. 로렌스 알렉산더(Laurence Alexander)교수는 언론인의 특권은 오락이나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 레크레이션, 스포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하는 언론인에게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sup>46)</sup>

정보제공의 대상을 공적 관심사로 두는 경우에만 특권을 인정하게 되면, 취재원 보호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 관심사 또는 뉴스가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언론인의 특권 인정여부가 달라진다.<sup>47)</sup> 어떠한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것인지, 어떠한 보도가 뉴스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글라스 판사는 공적 관심사(public affairs)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관심사 그 이상의 것으로 이해한다. 과학, 경제, 경영, 예술, 문학 등에 관한 모든 문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으며, 공공에게 보도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은 모두 공적 관심사라는 것이다.<sup>48)</sup>

언론인의 특권을 정보유통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여부를 달리하기도 한다. In von Bulow v. von Bulow 사건에서 제2 순회법원(the Second Circuit)은 정보의 수집과정 초기단계에 공공에게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인의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sup>49)</sup> 법원은 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당시에 공공에게 정보를 유통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면

46) Laurence B. Alexander, Looking out for the Watchdogs: A legislative proposal limiting the newsgathering privilege to journalists in the greatest need of protection for sources and information, 20 Yale L. & Pol'y Rev. 97, 104, 2002, p. 130.

47) Mary-Rose Papandrea(fn 1), p. 578.

48) 418 U.S. at 357 n.6(Douglas, J., dissenting), (Citing Mary-Rose Papandrea(fn 1), p. 579).

49) Von Bulow v. von Bulow, 811 F.2d 136, 142-143 (2d Cir. 1987).

그러한 기사는 궁극적으로는 취재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sup>50)</sup> In *Shoen v. Shoen* 사건<sup>51)</sup>에서도 기본적으로 *Bulow* 사건에서 주장한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뉴스가 공공에게 전달되는 매체와는 관계없이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가 정보를 수집할 때 공공에게 그것을 전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초기단계에서 정보전파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권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sup>52)</sup>

정보수집 초기단계에 정보제공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접근법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취재원 보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초의 정보제공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취재원 보호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반면에 ‘정보제공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고 순기능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문적 언론인 외에도 그 밖에 새로운 미디어나 시민언론에게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 2. 언론과정의 보호

취재원 보호의 목적을 정보의 유통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린다 버거(Linda Berger)는 언론인의 특권은 언론작업과정(journalistic work process)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한다.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통과정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공공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의 전파, 언론 내부의 검증수단, 언론과정(출판, 편집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춘다면, 이러한 언론과정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sup>53)</sup> 이러한 접근법에 의하면 언론인의 특권은 전형적이고 전문적인 언론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전문적 언론인 등에게도 특권이 적용가능 한 것으로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sup>54)</sup>

오늘날 언론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오늘날 언론인은 언론 조직에 종사하는 전문적 언론인 외에도 지역신문을 발간하거나 블로그를 작성하는 비전문적 시민언론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된다. 언론인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언론인, 기자 등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을 양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공적 논쟁에 정보가 제공되고, 그들이 민·형사상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비전문적 언론인에게도 특권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50) Mary-Rose Papandrea(fn 1), p. 569. id at 145-146.

51) *Shoen v. Shoen*, 5 F.3d 1289, 1293-1294. (9th Cir. 1993).

52) Mary-Rose Papandrea(fn 1), p. 570.

53) Linda L. Berger, *Shielding the Unmedia: Using the process of journalism to protect the journalist's privilege in an Infinite Universe of publication*, 39 *Hous. L. Rev.* 1371(2002), p. 1411-1412.

54) Mary-Rose Papandrea(fn 1), p. 583.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언론과정에 종사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은 그러한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5)</sup>

언론인 특권의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언론인의 특권은 전문적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인되지 않은 미디어나 일반에게 확대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부정직한 기사 등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만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6)</sup>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정의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을 연방대법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판단한다.<sup>57)</sup> 미국의 정보유통법안에서도 언론인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정보유통법안은 취재원의 보호를 위하여 연방차원에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언론인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 비전형적인 언론인인 블로그, 프리랜서, 웹사이트 제공자 등은 이 법안에서 보호하지 않는다.<sup>58)</sup> 이들은 뉴스나 원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뉴스를 수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수집되거나 종합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언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게 언론인의 특권에 의한 보호를 허락하는 것은 기사에 대한 편집기능이나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sup>59)</sup> 자칫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한 상당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60)</sup>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만 특권을 인정하게 되면 블로그 등 다른 시민언론은 특권으로부터 배제된다. 상당수의 시민언론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언론사의 전문적 기자나 편집인과 같은 헌법적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sup>61)</sup> 취재원 보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새로운 미디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Branzburg 사건에서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밝힌 원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the right of publish)은 민주적 헌법국가에 근본이며, 취재원 보호는 정보가 수집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그것을 수집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62)</sup> 언론인 특권의 근본적인 목표는 언론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언론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특권의 인정범위를 공공 관심사에 관한 보도로 한정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55) Mary-Rose Papandrea(fn 1), p. 585.

56) 이희훈,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8, 272면; 지성우, “언론기관의 취재원보호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2003, 16면.

57) Scott Gant, We're all journalist now 79-80(2007), at 84(Citing Amanda A. Konarski, p. 280).

58) Lauren J. Russell(fn 4), p. 198.

59) 최희경(주 18), 432면.

60) Lauren J. Russell(fn 4), p. 222.

61) Mary-Rose Papandrea(fn 1), p. 573.

62) Lauren J. Russell(fn 4), p. 225.

연방 하급법원도 기자들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미디어를 확대해오고 있다. 일부는 수정 헌법 제1조하에 전통적 미디어에 특권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새로운 전기통신매체에 의한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 시민을 포함하는 영역에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뉴스가 보도되는 양식이나 방법보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의도를 살펴서 특권을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정보전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양한 시민언론이나 디지털 언론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 제2 순회법원 역시 매체가 특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정보나 의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출판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 방송, 잡지뿐만 아니라 책, 공적·사적 미디어, 광고전단지와 같은 것들도 정보전달의 방법으로 의도될 수 있으며, 특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언론인과 정보원의 관계, 특권의 적용 여부 등은 정보를 전달이나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63)</sup>

언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개인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인의 특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언론인에게 우선적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안되며, 언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절차의 소환에 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sup>64)</sup> 하지만 언론과정은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공공에 대한 정보의 전달 및 유포과정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전 언론과정에 특권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사사법절차의 소환이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보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특권의 적용여부가 신중해야 한다.<sup>65)</sup>

### 3. 언론인과 정보제공자의 신뢰관계 보호

제퍼리 스톤(Geoffrey Stone)교수는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언론과정에서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66)</sup>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언론인과 정보원과의 신뢰관계를 들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인과 정보원의 신뢰관계는 보호될 수 있다. 그것은 정보의 유통과정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 정보가 가지는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과 비밀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언론인과 정보제공자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공공에게 다양한 규칙적 정보의 흐름이 보장된다.<sup>67)</sup>

63) Katyrn A. Rosenbaum(fn 9), p. 1440.

64) Amanda A. Konarski(fn 6), p. 281.

65) Mary-Rose Papandrea(fn 1), p. 590.

66) Mary-Rose Papandrea(fn 1), p. 582.

67) Mary-Rose Papandrea(fn 1), p. 582.

취재원 보호 목적을 언론인과 정보원 간의 신뢰관계로 볼 경우 언론사 스스로가 수집한 정보에도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스스로 수집한 정보(selbstrecherchierte Material)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입장<sup>68)</sup>이다. 취재원 보호의 규범목적이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간의 신뢰보호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 제공자에 의한 정보보호에 한정되고 내부의 직원에 의하여 직접 형성된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9)</sup>

정보제공자와의 언론인의 신뢰관계 보장도 취재원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증언거부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취재원 보호의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sup>70)</sup>이 있다. 언론의 자유의 보호 목적은 방해 없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에 있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제공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언론사의 자기정보와 스스로 수집한 정보가 구별하기 쉽지 않고,<sup>71)</sup> 언론인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라고 하여 보호가치가 더 작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 자체도 보호하지만, 언론인의 독자적 지위에서 자신의 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정보수집의 전 과정을 보호한다.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뿐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도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외부에서 제공된 정보와 언론사 스스로가 수집한 정보가 결합된 경우에 이것을 분리하여 특권의 인정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정보제공자에 의한 정보와 자기수집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도 취재원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된다.<sup>72)</sup> 정보제공자와 언론인 간의 신뢰관계의 보호는 언론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취재원 보호 배제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취재원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자유로운 정보수집과 그것의 전파과정에 있고,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 보호는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킨다.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사이의 비밀정보라는 주관적 관점에 기초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은 전문적·직업적·조직적 미디어 종사자에게만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시민언론인에게도 특권이 확대될 수 있다.<sup>73)</sup>

68) BVerfGE 77, 65.

69) BVerfGE 77, 65, 72f.

70)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fn 8), S. 207.

71) 지성우(주 56), 17면.

72)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fn 8), S. 207; BGH in NJW 1990, S. 525.

73) Mary-Rose Papandrea(fn 1), p. 582.



## V.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과 방향

### 1.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

우리 학계에서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주장된다. 그러한 경향과는 달리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연방차원의 규율이 있다. 미국은 Branzburg사건 이후 주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취재원 보호법이 도입되었다.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은 미국 사회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가치가 진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sup>74)</sup>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안은 Branzburg사건 보다 앞서서 제안되었다. 1929년 캔사스(Kansas) 상원의원이 언론인의 특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Branzburg사건 이듬해 71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Branzburg사건 6년 후 99개의 연방 취재원 보호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취재원 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언론인의 정의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한정된(qualified) 특권이 아닌 절대적 특권을 입법화 하려고 했던 미디어의 주장 때문이었다.<sup>75)</sup> 그 이후에도 연방 취재원보호법은 1970년대와 1980년에 주기적으로 제출되었으나, Branzburg사건 직후의 법제정을 위한 긴급성은 감소되었다. 왜냐하면 연방하급법원(federal circuits)이 그 사건의 해석으로부터 한정된 취재원보호권을 인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sup>76)</sup>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취재원보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밀러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정보의 비밀포기 각서를 확인한 후 대배심에서 증언을 할 것을 동의하기까지 구속<sup>77)</sup>되었던 리크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정보유통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2005년, 2007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제출 된 정보유통법안이 그것이다. 정보유통법안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정보유통법안은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되는 언론인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sup>78)</sup>

상원의원 크리스 도드(Chris Dodd)에 의해 제안된 2005년 법안에서는 뉴스나 정보의 수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뉴스나 정보의 수집 의도를 가지고, 이를 공공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법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원의원 부처(Boucher)과 상원의원 루거(Lugar)에 의해 각각 2007년에 제안된 정보유통법에서는 법적용대상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하원법안에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그의 감독자, 고용주, 부모 등으로, 상원법안에는 언론에 종사하

74) Amanda A. Konarski(fn 6), p. 273.

75) Lauren J. Russell(fn 4), p. 206-207.

76) Lauren J. Russell(fn 4), p. 207.

77) Lauren J. Russell(fn 4), p. 208.

78) Lauren J. Russell(fn 4), p. 209.

는 사람을 포함하여, 언론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2009년 법안은 2007년의 하원법안이 그대로 발의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도 공식적으로 찬성을 하였다.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법적용대상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에 의하면 법적용대상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종사하는 지위로 초점이 바뀌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급료를 받는 종사자, 독립적 계약자 등의 독립체가 적용대상으로 되었다. 결국 이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3년에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정보유통법안이 발의되었다. 상원법안(Senate Bill 987)은 상원의원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에 의해, 하원법안(House Bill 1962)은 하원의원 테드 포(Ted Poe)에 의해 발의되었다. 상원법안의 법적용대상은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 소셜, 전파, 뉴스통신, 뉴스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른 뉴스나 정보서비스를 수단으로 뉴스나 정보의 전달을 유포하는 고용인, 독립계약자, 기관 또는 서비스하는 사람 등이 법적용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뉴스나 정보를 공공에게 유포하기 위하여 소재를 찾거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주요한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 등의 수집과정의 초기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자 등이다. 하원법안의 법적용대상은 재정적 이익이나 생계를 위하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들의 감독자, 고용인, 부모, 자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유통법의 제정은 실패하였지만, 아직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나 언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의 보호를 위한 전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2. 취재원의 보호의 전제와 방향

### 1) 입법적 해결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범죄정보를 제공한 취재원 보호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률의 부재는 언론인의 특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약화시킨다. 잠재적 정보원은 그가 정보를 제공한 언론인과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sup>79)</sup> 정보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방안이다.

79) Amanda A. Konarski(fn 6), p. 273.

## 2) 취재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의 수집과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취재원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언론인의 특권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80)</sup>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인의 의무가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이다. 언론인은 우선적으로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저널리즘은 일반 국민에 대한 충실해야 하며, 진실에 대한 확인의무가 그 본질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은 그들의 보도와 관련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은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공공의 비판을 위한 공적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이나 의무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면,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특권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법집행당국은 법률적 보호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70년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우리 사법행정당국의 법집행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인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정보유통의 공공의 이익과 정당한 법집행이 가지는 공적 이익을 형량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언론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전에 다른 방법에 의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언론사, 대배심, 법원 등과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의 원칙상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뉴스 정보를 수집하는 언론활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용으로부터 그들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sup>81)</sup> 언론사와 언론인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정당한 법집행, 언론의 자유의 역할 등 핵심적 가치를 형량해야 한다.<sup>82)</sup>

법무부장관이 언론인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한다.

언론인이 뉴스정보 수집활동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위반한 범죄와 관련하여 조

80) Amanda A. Konarski(fn 6), p. 273.

81) 28 C.F.R. § 50.10 (a) (1).

82) 28 C.F.R. § 50.10 (a) (2).

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소환장을 발부해야 할 권한 등 관련 사실 모두를 제시해야 한다.<sup>83)</sup>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를 유발한 공적 정보 또는 비언론적 출처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검찰의 기소나 조사에 본질적으로 필요해야 한다. 소환장은 지엽적이거나 비본질적인 그리고 추측에 의한 정보에 발부되어서는 안된다.<sup>84)</sup> 민사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sup>85)</sup>

정부는 다른 대안적인 비언론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sup>86)</sup>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의 압도적인 필요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언론인과 협상을 추구하여야 하고, 조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나 기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sup>87)</sup>

발부된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보도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한 주변 상황이나 정보의 확인에 제한되어야 한다.<sup>88)</sup> 소환장의 발부는 뉴스정보 수집활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되며,<sup>89)</sup> 아주 신중하게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자료 및 합리적인 시간 등을 지키면서 발부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sup>90)</sup>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sup>91)</sup> 그리고 조사나 체포, 기소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sup>92)</sup>

## Ⅵ. 나가며

지금까지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취재원은 보호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범위의 확대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취재원의 보호가 자유로운 언론과정의 보호에 있다면 보호범위를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 한

83) 28 C.F.R. § 50.10 (4) (i).

84) 28 C.F.R. § 50.10 (4) (ii) (A).

85) 28 C.F.R. § 50.10 (4) (ii) (B).

86) 28 C.F.R. § 50.10 (4) (iii).

87) 28 C.F.R. § 50.10 (4) (iv) (A).

88) 28 C.F.R. § 50.10 (4) (v).

89) 28 C.F.R. § 50.10 (4) (vii).

90) 28 C.F.R. § 50.10 (4) (viii).

91) 28 C.F.R. § 50.10 (e).

92) 28 C.F.R. § 50.10 (f).

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취재원 보호의 확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잠재적 정보제공자와 언론인 간에 그들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적 완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한다면, 사법행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형성/한상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취재원보호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2005. 12.
- 오양호, “취재원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이어야”, 신문과 방송, 2003. 9.
- 이희훈,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8.
- 지성우, “언론기관의 취재원보호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2003.
- 최희경, “미국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2008.
-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 Jane Kirtley, The Future of privilege for the press, 19 Comm. L. & Pol’y 109, 2014.
- Jeffrey S. Nestler, The underprivileged profession: The case for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the journalists privilege, 154 U. Pa. L. Rev. 201, 222(2005).
- Joseph W. Trusi, The reporter’s privilege in the 21st Century: The need for a qualified Federal Media Shield Law that balances freedom of speech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54 Santa Clara L. Rev. 201, 2014.
- Katryrn A. Rosenbaum, Protecting more than the front page: Codifying a reporter’s privilege for digital and citizen Journalists, 89 Notre Dame L. Rev. 1427, 2014.
- Lauren J. Russell, Shielding the media: In an age of bloggers, tweeters, and leakers, will congress succeed in defining the term “Journalist” and in passing a long-sought Federal Shield Act?, 93 Or. L. Rev. 193, 2014.
- Laurence B. Alexander, Looking out for the Watchdogs: A legislative proposal limiting the newsgathering privilege to journalists in the greatest need of protection for sources and information, 20 Yale L. & Pol’y Rev. 97, 104, 2002.
- Linda L. Berger, Shielding the Unmedia: Using the process of journalism to protect the journalist’s privilege in an Infinite Universe of publication, 39 Hous. L. Rev. 1371(2002).
-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 Mary-Rose Papandrea, Citizen journalism and the reporter’s privilege, 91 Minn. L. Rev. 515, 2007.
- Ronald D. Rotunda/John E. Nowak,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West Publishing Co.), 5th ed., vol. 4, 1992.

투고일자 : 2018. 06. 16

수정일자 : 2018. 06. 24

게재일자 : 2018. 06. 30

## &lt;국문초록&gt;

##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조 재 현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도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범위의 확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취재원보호와 관련된 언론인의 특권은 반드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취재원의 보호가 자유로운 언론과정의 보호에 있다면 보호범위를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적 언론인 외에도 새로운 미디어나 시민언론에게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취재원 보호의 확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와 확대에 관한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률의 부재는 언론인의 특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약화시키며, 잠재적 정보원은 정보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입법적 해결은 정보제공자와 언론인 간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보유통을 촉진시킨다. 만약 입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한다면, 사법행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1970년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언론, 공정보도, 취재원, 언론인의 특권, 시민언론

